

건설동향브리핑

제408호 (2013. 4. 22)

■ 경제 동향

- 2월 국내 건설수주 46.4% 감소

■ 정책 · 경영

- 2013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
- 해외건설 손실 리스크 저감 대책 제안

■ 정보 마당

- 2013년 미국 인프라 평가 보고서 분석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국민 행복 시대와 건설업 부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월 국내 건설수주 46.4% 감소

- 2012년 8월부터 7개월 연속 마이너스 20~40%대의 극심한 감소세 지속 -

■ 전년 동월 대비 46.4% 감소, 7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 2013년 2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부진해 전년 동월비 46.4% 감소한 4조 3,555억원을 기록하여 결국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7개월 연속 마이너스 20~40% 수준의 높은 감소세를 지속함.
- 지난 2012년 2월 수주가 2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인 8조 1,218억원을 기록한 데 따른 영향으로 두 자릿수 이상 감소한 측면도 있지만, 2007년 이후 2월 수주가 대부분 5조~6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수주액 자체도 예년 수준에 못 미친 것으로 판단됨.

■ 공공 부문 : 토목과 주거용 건축 부진으로 41.7% 감소

- 공공 부문은 주거용 건축과 토목수주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7% 감소한 1조 2,624억원을 기록함.
- 공공 토목수주는 철도와 항만 등 일부 수주가 증가하였으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 수주가 부진하여 전년 동월 대비 47.2% 감소한 9,547억원을 기록, 7개월 연속 감소함.
- 공공 주거용 건축수주는 9개월 만에 가장 부진한 663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66.3% 감소해 지난 1월의 -63.2%에 이어 높은 감소세를 지속함.
- 한편,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주한 미군 기지 공사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2% 증가한 2,415억원을 기록, 지난 1월의 34.1% 감소에서 크게 반등함.

<2013년 2월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 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2. 2월	8,121.8	2,164.8	1,807.6	357.1	196.4	160.8	5,957.0	3,063.8	2,893.2	1,412.4	1,480.8
2013. 2월	4,355.5	1,262.4	954.7	307.7	66.3	241.5	3,093.1	379.7	2,713.4	1,385.1	1,328.3
증감률	-46.4	-41.7	-47.2	-13.8	-66.3	50.2	-48.1	-87.6	-6.2	-1.9	-10.3
2012. 1~2월	15,366.1	4,141.0	2,800.1	1,340.9	938.3	402.7	11,225.1	4,174.3	7,050.8	4,500.8	2,550.0
2013. 1~2월	7,779.1	2,568.2	1,828.1	740.1	339.1	401.0	5,210.9	1,133.0	4,077.9	1,878.0	2,199.9
증감률	-49.4	-38.0	-34.7	-44.8	-63.9	-0.4	-53.6	-72.9	-42.2	-58.3	-13.7

자료 : 통계청(민간 수주는 국내 외국 기관과 민자 수주액이 포함된 금액임).

■ 민간 부문 : 전 공종 부진, 48.1% 감소

- 민간 부문은 토목과 건축 모두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48.1% 감소,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작된 감소세를 지속함.
 - 민간 토목수주는 2월 실적으로는 6년 내 최저치인 3,797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87.6% 급감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주거용 건축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한 1조 3,851억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에 기록했던 80%대의 급격한 감소세는 다소 완화
 -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한 1조 3,283억원으로, 지난 1월의 18.5% 감소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함.

■ 건축에서는 공장 및 창고, 토목에서는 도로 및 교량, 발전 및 기계, 기계 설치 등이 부진

- 건축 공종의 경우 사무실 및 점포와 기타 수주를 제외하고 모두 부진하였음.
 - 사무실 및 점포와 기타 수주가 각각 32.9%, 14.6% 증가해 양호했으나, 주택, 공장 및 창고, 관공서 수주는 각각 9.8%, 55.2%, 6.7%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보임.
- 토목 공종의 경우 철도 및 궤도, 항만 및 공항, 토지 조성 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비중이 큰 도로 및 교량, 발전 및 송전, 기계 설치 등이 부진
 - 철도 및 궤도 수주는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1.4% 급등함. 항만 및 공항 수주는 가거도항 수퍼 방파제 공사의 영향 및 기저 효과로 163.1% 급등
 - 도로 및 교량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61.6% 감소해 부진하였음.
 - 발전 및 송전 수주와 기계 설치 수주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95.3%, 82.4%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보임.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항만 및 공항	토지 조성	발전 및 송전	기계 설치
2013. 2월	1,451.4	911.9	224.0	385.1	48.7	199.0	156.8	193.0	191.6	107.8	287.8
증감률	-9.8	32.9	-55.2	-6.7	14.6	-61.6	611.4	163.1	27.3	-95.3	-82.4
2013. 1~2월	2,217.1	1,299.6	543.1	588.3	169.8	504.3	175.5	220.3	292.3	203.8	1,147.8
증감률	-59.2	10.2	-47.7	-11.9	152.3	-29.2	69.5	12.9	4.9	-93.8	-45.6

자료 : 통계청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2013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

- 총 17.3조원 배정, SOC 예산은 0.7조원 증액에 그쳐 -

■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총 17.3조원의 추경안 마련

- 세출 확대, 일자리 확충, 민생 안정, 경제 회복을 위해 총 5.3조원(기금 포함시 7.3조원)의 예산 배정
 - 일자리 확충 및 민생 안정 : 3조원
 - 중소기업 지원 : 1.3조원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방 재정 지원 : 3조원
-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결손 보전에 12조원 배정, 추경의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확대, 세출 감액 등 0.8조원과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

■ SOC 예산, 24.3조원에서 25조원으로 0.7조원 증액

(단위 : 조원)

구분	2012년	2013년 본예산(A)	2013년 추경안(B)	증감(B-A)
총 지출	325.4	342.0	349.0	7.0
1. 보건·복지·노동	92.6	97.4	99.4	2.0
2. 교육	45.5	49.8	49.9	0.1
3. 문화·체육·관광	4.6	5.0	5.1	0.1
4. 환경	5.9	6.3	6.6	0.3
5. R&D	16.0	16.9	17.1	0.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1	15.5	16.5	1.1
7. SOC	23.1	24.3	25.0	0.7
8. 농림·수산·식품	18.1	18.4	18.8	0.5
9. 국방	33.0	34.3	34.6	0.2
10. 외교·통일	3.9	4.1	4.1	-
11. 공공 질서·안전	14.5	15.0	15.2	0.2
12. 일반 공공 행정	55.1	55.8	56.2	0.4

자료 : 기획재정부,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 2013. 4.

■ 서민·취약 계층의 주거 생활 개선 지원 확대

- 주택 구입·전세 자금 지원을 위해 4,000억원 증액(6.65조원 → 7.05조원)

구분	2013년 예산(A)	증액(B)	합계(A+B)	비고(4.1 주택 종합 대책)
전세 자금	6.6조원	+0.3조원	6.9조원	금리 : 3.7 → 3.5%, 소득 : 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 → 4,500만원
구입 자금	0.05조원	+0.1조원	0.15조원	금리 : 4.3 → 4.0%, 소득 : 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 → 4,500만원

- 보금자리론 확대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출자 0.1조원 증액(0.1조원 → 0.2조원)
- 전세 임대 추가 공급(8,000호)으로 임대 주택 입주 대기 최소화(1조원 → 1조 6,240억원)

구분	2013년 공급 물량			2013년 예산		
	당초(A)	추가(B)	합계(A+B)	당초(A)	증액(B)	합계(A+B)
전세 임대 주택	1만 7,000호	+8,000호	2만 5,000호	1조원	+6,240억원	1만 6,240억원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 관련 투자 확대

- 안전 투자 확충, 시설 개·보수에 중점 지원
 - 중요 도로·철도·댐·항만 시설 개량 등 안전 투자 확대(1조 3,514억원 → 1조 5,957억원)
 - * 위험 도로 구조 개선(708억원 → 1,352억원), 철도 시설 개량(2,732억원 → 3,332억원) 등
 -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우수 저류 시설 설치 등 재해 예방 투자(6,812억원 → 8,312억원)
 - 하수처리장, 공단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조기 완공(1조 5,417억원 → 1조 7,645억원)
 - * 하수 처리장 확충(4,213억원 → 4,460억원), 공단 폐수 처리 시설(3,013억원 → 3,627억원)
- 지역 산업 육성 및 농촌 지원
 -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숙박 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용자 지원 확대(2,920억원 → 3,070억원)
 - 국립 공원의 야영장·캠핑장 확충(120억원 → 150억원)
 -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해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 방재 시설의 설치 지원 확대로 이상 기후에 안전한 영농 활동 지원(2,700억원 → 3,000억원)
 - 파손 및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 등의 개·보수, 농경지 진입로 확장 등 용·배수로 정비 지원 강화(4,300억원 → 4,600억원)
 - 농어촌 지역 하수도 시설 확충(1,008억원 → 1,364억원)

■ 경기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SOC 투자 확대 필요

-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분야의 투자 확대가 필요
-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와 생산 유발 효과가 크고, 수입 유발 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작아 국내 경기 활성화의 수단으로 매우 적합함.

박용석(연구위원 · yspark@cerik.re.kr)

해외건설 손실 리스크 저감 대책 제안

- 건설산업 전체로 확산 가능성 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 시급 -

■ 해외건설 손실 리스크 현실화의 내·외적 요인

- 기업의 내적 요인
 - 글로벌 인재, 생산성 혁신, 프로젝트 관리(PM) 역량 미비 등 해외건설 소화력 부족
 - 수주 지상주의식 단기 성과 인사 평가로 인해 수익보다 물량 확대에 집중
 - 본사 및 지원 시스템보다 파견 소장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기업의 기술 전략
- 기업의 외적 요인
 - 국내 업체 간 경쟁을 부추기는 해외 발주기관의 의도된 저가 낙찰 유도 전략
 - 국내 업체 간 공정한 경쟁보다 마타도어식 경쟁*의 저가 입찰
 - 해외시장의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전할 수 있었던 내수시장의 수익성과 물량이 동시에 하락하여 'Cash Cow(수익 창출)' 여력이 상실된 상태가 현실화됨.

■ 기업의 손실 리스크 방치시 예상되는 결과

-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 부재시 손실로 인해 기업 생존과 일자리에 타격 불가피
 - 1980년대 초·중반과 같이 해외시장이 현재의 1/10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높음.
- 잠재된 리스크보다 훨씬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외부 지원에 의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개별 기업의 문제에서 산업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큼.

■ 단기 대책 제안

- 대기업군
 - 시급한 선제 전략은 기업 내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하는 '소방수' 조직 가동
 - 막바지에 이른 일정 규모 이상 사업별 리스크 진단 및 단기 대응책 수립
 - 수립된 대응책은 역량이 결집된 '소방수' 조직을 투입해 손실 최소화 시나리오 가동

* 마타도어(Matador)식 경쟁 :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방을 중상 모략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하는 '흑색 선전'과 같은 불공정 경쟁

- 중소기업군
 - 정부 혹은 해외건설협회를 중심으로 한 위기 대응팀(RRT, Risk Response Team)의 설치 및 가동
 - 위기 대응팀은 범 산업 차원에서 해당 분야 유경험 · 자유직에서 발굴
 - 진도율 75%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손실 리스크 진단 및 대응책 수립
 - 위기 대응팀을 가동하되 비용은 해당 기업이 부담

■ 손실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제안

- 기업 내 소방수의 역할인 해외건설 지원을 위한 상설 플랫폼 조직
 - 리스크의 상시 분석, 전략 및 계획의 수립 지원, 문제점 혹은 분쟁의 발생시 응급 지원을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전담 조직의 가동
- 중국 · 인도 등 신흥국 기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생산 기술의 개발 및 혁신 전략 실천
- 글로벌 수준의 프로젝트 관리(PM) 역량 개발 및 글로벌 인재 양성에 집중
- 수주액 중심의 평가 체계에서 수익성 중심의 평가 체계로 인사평가제도 혁신 등

■ 예상 가능한 정부의 대응 역할 주문

- 정부가 직접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은 쉽지 않지만, 간접적인 지원 역할은 가능
 - ‘불공정한 경쟁’으로 확인될 경우, 금융 · 보증기관을 통해 향후 국내외 사업 수행에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
 - 해외건설 순이익에 대해 일정 수준의 법인세 감면 혜택 인센티브제를 한시적 도입
- 해외건설 시장, 주요 발주기관, 산업과 사회 환경, 공사 계약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중소기업들에게 상시 제공하는 ‘해외건설 정보허브센터’의 설치 운영
- 글로벌 인재 양성을 글로벌 PM 전문가 과정으로 특화시켜 집중 지원
- 대외원조자금(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을 현지 기능 인력의 양성과 연결시켜 국내 업체의 원가 부담을 경감

이복남(연구위원 · bnlee@cerik.re.kr)

2013년 미국 인프라 평가 보고서 분석

- 2009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D+, 투자 규모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 -

■ 전체 평점 D+, 2020년까지 인프라 개선에 3조 6,000억 달러 투자해야

- 지난 3월 19일, 미국 토목공학회는 「2013 Report Card for America's Infrastructure (이하 인프라 평가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미국 인프라의 전체 평가 등급은 D+로 2009년 D에서 한 등급 상승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시설물을 만족할 만한 수준(평가 등급 B)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3조 6,000억 달러(약 4,00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음.
 - 각 시설물군별 평가 등급은 대부분 2009년의 평가 결과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나 약간의 개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평가 등급은 15년 내 최초로 상승하였는데, 최근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내건 오바마 정부의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투자가 확대된 결과로 풀이됨.

<시설물군별 평가 등급 비교(2009년, 2013년)>

구분		2009년	2013년	변동	구분		2009년	2013년	변동	구분		2009년	2013년	변동	
수자원 및 환경	댐	D	D	-	교통	공항	D	D	-	공공 시설	공원	C-	C-	-	
	상수도	D-	D	▲		교량	C	C+	▲			학교	D	D	-
	유해 폐기물	D	D	-		수로	D-	D-	-		에너지	에너지	D+	D+	-
	제방	D-	D-	-		항구	-	C							
	고형 폐기물	C+	B-	▲		철도	C-	C+	▲						
	하수도	D-	D	▲		도로	D-	D	▲	운송	D	D	-		

주 : 평가 등급은 A(매우 우수 : 미래에도 적합), B(우수 : 현재 상태로는 적합), C(양호 : 주의 요망), D(미흡 : 위험 수준), F(매우 미흡 :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구분됨.

* 본고는 「2013 Report Card for America's Infrastructure」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미국 토목공학회는 1998년부터 4~5년을 주기로 인프라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인프라 평가 보고서는 국가 인프라의 수용 용량, 물리적 상태, 재정 조달 현황, 미래 수요, 유지 관리, 공중 안전, 회복력 및 혁신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한 보고서임.

■ 인프라 관리에 소홀한 투자로 인해 위협받는 국민의 안전

- 필요 재정의 55.6% 정도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2020년까지 인프라 분야에 필요 재정은 3조 6,000억 달러인 반면, 예상되는 투입 재정은 2조 달러로 1조 6,000억 달러의 격차 발생
 - 대부분의 시설물군에 투자되는 재정은 필요 재정의 1/3 수준이며, 특히 제방 분야에는 필요 재정의 1/10 정도만 투자되고 있음.

<시설물군별 재정 투입 현황 및 필요 재정>

(단위 : 십억 달러)

시설물군	필요 재정	예상 투입 재정	차이	시설물군	필요 재정	예상 투입 재정	차이
지상 교통	1,723	877	846	유해·고형 폐기물	56	10	46
상·하수도	126	2	84				
전기	736	629	107	공원 시설	238	134	104
공항	134	95	39	철도	100	89	11
수로 및 항구	30	14	16	학교	391	120	271
댐	21	6	15	계	3,635	2,024	1,611
제방	80	8	72	연간 재정	454	253	201

주 : 표에 제시된 수치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8년 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노후화된 인프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60만 7,380개 교량이 건설된 지 평균 42년이 되었으며, 9개 중 1개의 교량이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미국의 102개의 대도시에서는 노후화되어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교량을 매일 2억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음.

■ 인프라 D+ 등급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2020년까지 일자리 350만 개 감소, 가정마다 가처분 소득 2만 8,000달러 감소
 - 2020년까지 인프라에 부족한 투자가 지속된다면 35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성능이 저하된 인프라로 인해 업계는 1조 2,000억 달러, 가계는 6,00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강상혁(연구위원 · shkang@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4. 17	국토연구원	• 국토연구원 주최, '단독 주택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 보증 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참여
4. 18	중소기업연구원	• 중소기업연구원 주최, '대규모 계약의 분리, 분할 관련 간담회'에 강운산 건설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자로 참여 - 발표 주제 : 종합 건설업체 입장에서 바라본 분리 분할 발주의 문제점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주최, '공동 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참여 - 하자 심사 분쟁 조정

■ 「CPM 공정 관리 전문가 양성 과정」 개설

- 기간 및 장소 : 2013년 5월 8일(수)~22일(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9층 연수실
- 대상 : 졸업 예정자, 구직자(실업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정부 지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미수강 중인 사람, 업체 재직자 등
- 수강 신청 기간 : 2013년 5월 3일(금)까지
- 교육 내용 : 공정 관리의 현상과 실상, PM/CM과 공정 관리의 이해/공정 관리 기법/실무 공정 관리/실무 사례 및 활용/공정 관리 발전 방향 등
- 문의 및 참조 : 연구원 교육 담당(02-3441-0691, 0848),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 「새 정부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세미나 공동 개최

- 연구원은 지난 4월 17일(수), 한국주택학회(회장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공동으로 '새 정부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제1주제 : 주거복지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발제자 : 이상한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제2주제 : 새 정부 주택 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제자 :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 실장)
- 토론 : 손경환 국토연구원 박사의 사회로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박사, 변창흠 세종대 교수, 손재영 건국대 교수, 이창무 한양대 교수, 윤주선 한호건설 대표 등 참여

국민 행복 시대와 건설업 부활

바야흐로 ‘국민 행복 시대’의 막이 올랐다. 행복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경제학적인 정의에 의하면 행복은 우리의 욕구(Needs 또는 Wants)에 대비한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욕구가 무엇인지 안다면 조금 더 행복해지기 쉽지 않을까.

행동 과학자인 에이브러햄 매슬로우(Abraham H.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하위 단계에서 부터 상위 단계까지 다섯 단계로 체계화해서 설명하고 있다. 1단계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이며, 2단계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 3단계 욕구는 사회에 대한 귀속감이나 애정에 관한 욕구, 4단계의 욕구는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최상위의 욕구인 5단계의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하니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려면 적어도 3단계의 욕구는 만족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 행복 시대의 출범을 맞이하여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서 현재 167만 1,000명이 종사하는 건설업계의 상황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워크아웃으로 귀결되기는 했지만, 며칠 전 불거진 쌍용건설 사태는 건설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시공능력 100위 이내 업체들 중 20여 개의 업체들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1/4분기 상장 건설업체의 현금 흐름 보상 비율은 -24.43%이다. 이는 상장 건설업체들조차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이 단기 차입금과 이자 비용을 부담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건설업은 여전히 취업유발계수와 생산유발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간접자본을 구현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그런데 건설업에 종사하는 167만 1,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당장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속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최소한의 안전의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국민 행복 시대의 구현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 정부가 얘기하는 복지의 확대는 경제 성장의 선순환 속에서 풀어야 한다. 그리고 편안한 주거와 더욱 편리한 교통 시설, 자연 재해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내는 방재 시설의 구축은 국민들의 안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복지의 첫 걸음이다. 이제 167만 1,000명의 건설인들을 더 이상 위기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국민 행복 시대에 건설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서울경제, 2013. 3. 5>

김민형(연구위원 · mhkimcerik.re.kr)